



# 양계 안 테 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닭 산업의 모든 것 집중분석 농촌진흥청 「RDA Interrobang」에 소개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RDA Interrobang」지에 닭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닭 산업의 날개달기’란 주제로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지방함량이 낮고 유용 단백질이 높은 백색육으로서 닭고기의 영양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 등 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집중 분석되었다.

소개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닭은 가축으로서 약 5,000년 전 동남아 등에서 키워지기 시작해 전 세계로 전파됐고, 식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개벽의 상징이자 신성함, 부귀공명을 상징하는 친근한 동물로, 닭 요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며 그 숫자만큼 다양한 맛을 뽐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인의 요리재료로 사랑받는 닭고기는 한 해 7천4백만 톤가량 생산되며, 1인당 소비량은 약 10.7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A Interrobang」은 우리 닭 산업의 비상을 위해 미래형 생산시스템, 선진 유통시스템, 종자주권, 융·복합기술,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화라는 6개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신소재,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현대적 생산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둘째, 제품의 다양화, 콜드체인 시스템 확대를 통한 신선도 유지, 이력추적제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강화 등 선진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 1% 수준인 국가개발 토종종자의 보급률을 높여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과 목표가 분명한 액션플랜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넷째,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1차 산업으로 간주되던 닭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애완용, 관광용, 교육용 닭의 인기를 활용하고 지역별 테마를 결합한 복합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한식 세계화와 연계해 토종 식재료로서 우리 닭의 수출확대를 이루고,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적원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닭 산업의 여섯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도입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1차 생산업으로 간주되던 닭 산업 외연을 확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과 함께, 융·복합 R&D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RDA Interrobang』은 지난해 1월 12일 창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축수산업의 주제를 다루며,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소개하는 기관지로 이번에 22호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호를 통해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닭 산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http://m.rda.go.kr>)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를 통해서도 자세히 볼 수 있다.

## 동물 및 축산물 위기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 및 예방에 큰 역할 기대

정부에서는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축산식품 위해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위기대응센터’를 신설, 운영키로 하였다.

그동안 AI와 관련해서는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해 운영되어 왔으나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막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비상대책본부를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두어 운영해오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위기대응센터’ 신설은 축산업계에 질병대처와 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기대응센터’는 농림수산검역검사부내에 상설기구로 마련되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축산식품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면 ‘위기대응센터’에서는 위기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제역,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종합적으로 검토, 운용해 위기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기하게 된다. 또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응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위기대응 관련 정보수집·관리 및 홍보가 이루어지며, 이 외에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휘소연습(CPX) 주관, 동식물 질병에 대한 방역업무 및 위기대응관련 정보화 계획 수립·시행, 축산물의 안전관리 및 연구업무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등이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AI는 지난 5월 경기도 연천을 끝으로 발생보고가 없어 사실상 종료선언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대책이 수립되고, 재정비 되어 왔지만 막상 질병이 발생하면 허점이 많이 들어났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신설된 ‘위기대응센터’가 하나의 이름뿐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예찰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도 충분히 배치하여 공백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설기구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7월 시행 동물보호단체 등 강력 반발

지난 21일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및 대한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는 정부과천청사에 모여 시민 및 수의사 4,000여명이 모여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서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동물복지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바꾸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친숙한 동물로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소, 돼지, 닭 등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업동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동물을 진료할 때 면제되었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7월부터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추후 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부가세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처리비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수공용전염병이 전파되어 국민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 놓고 있는데 정부가 세원만을 늘리기 위해 4일만에 입법 처리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부가세 철폐를 위한 청원입법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서민들 보다는 어느 정도 산다는 부유층 사람들이므로 부과세를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약사법과 관련하여 의사회와 약사회가 밥그릇싸움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입법화는 모양새가 그리 좋게 비춰지지 않는다.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소모적인 정쟁은 없이 정부, 관련업계(수의사 등),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국민 모두 불만없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양계**